

【 2017.11.7(화)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7일 오후 3
시 서울 여의도
동 국회의원회
관 대회의실에
서 열리는 공사
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 2017.11.7(화)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는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 참
석한다.

적정공사비만 지급돼도 매년 일자리 5만개 창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취업 유발효과가 탁월한 건설산업에선 '일자리 지키기'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공 발주기관들의 박한 공사비 탓에 '공공공사=적자' 구조가 굳어지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3면

전문가들은 공공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면 해마다 4만7500개씩 향후 4년간 19만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추산한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백재현·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박명재·윤재욱·이우현(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최 실장은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자료에서 공공부문의 비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입찰시스템 정상화를 통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연간 3조5800억원의 공공공사 공사비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2%포인트, 일자리 창출효과는 4만7500명이다. 실업률은 0.15%포인트 감소하고 가계소득은 1조6650억원 증가한다. 민간소비 증가효과는 1조1800억원 규모다.

최 실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

사업 없이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만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달성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행 공공공사의 채산성이 얼마나 나쁜지를 방증한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공공공사의 공사비 실태진단' 발표자료에서 공공건설을 많이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채산성이 나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형건설사의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78.6%가 적자였다. 현행 공공 공사비 산정 및 입찰 시스템에선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깎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초 100원으로 설계된 공공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등 예정

가격을 거치면서 10.4~16원이 깎이고 입찰 과정에서 다시 84~89.6% 수준으로 삭감된다.

적정 공사비 확보없는 공공공사 현장에선 유찰과 공기 연장, 안전 사고, 품질 저하 등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기술형 입찰 50건(2015년) 중 절반(25건)이 유찰됐고 전체 공공공사의 30.9%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재해 중 중대 재해 발생비율은 2009년 44%에서 2015년에는 68%로 되레 늘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다"며 "일단 깎고 보자' 식의 관행화된 공공공사 발주시스템을 바꿔 공사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公共공사=적자’ 구조 속

건설업계 경영난 악화일로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 상황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으로

고용·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오늘 '공사비 정상화' 국회 토론회

제값 주는 공공공사... 기업 공간 채워져야 고용도 살아나

‘수익 없는 곳엔 일자리도 없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해법은 이처럼 당연한 경제원리에서 출발한다. 공공부문의 구조화된 공사비 삭감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술해 기업들의 채산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건설 일자리 늘리기의 시작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 연구실장은 공공 공사비 적정화가 필요한 이유로 5가지를 꼽는다.

첫째,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발주자가 아닌 건설기업이 만든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일자리 창출보다 채산성 악화, 물량 축소로 인해 직업 안전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둘째, 공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종합건설사의 98.4%가 중소기업이다. 최 실장은 “대형업체에는 경쟁을, 중소기업에는 보호·육성책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셋째, 공공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공공과 민간은 영역이 다르다. 민간은 건축과 주택시장 중심인 반면 공공은 토목 위주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외시장은 일부 대형사들의 영역일 뿐이다.

넷째, 공공시설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규제만으론 어렵다. 이윤 확보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한 최소

공사비 삭감시스템 대수술 건설사 채산성 회복 급선무

시설물 품질·안전문제 직결 저가경쟁 유도하는 입찰제도 불공정관행 개선 병행돼야

한의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 부족한 비용은 결국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

다섯째, 공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세금을 내는 똑같은 국민이다. 최 실장은 “민간시장의 호황이나 공공 건설물량의 축소와 무관하게 공공시장의 참여주체로서 부당한 공사비 책정문제는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결책으로는 공사비 산정방식과 입·낙찰제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한꺼번에 추진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쟁적인 예산절감 기조와 후진적인 사업비 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 지금은 설계서와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준공금액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최 실장은 “이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재정당국은 예산 대비 집행에 실패하고, 발주자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건설기업은 적정 공사비 확보 실패로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국민은 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을 위협받는다.

해법으로는 공사비 관리의 최종목표를 단기적인 공사비 절감 기조에서 총사업비(공사비)를 최종 준공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설계서에 부합하는 공사비 산정으로 일관되고 전문화된 공사비 산정·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300억원 미만 사업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거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낙찰제도는 가격보다 품질·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변별력을 강조해야 한다. 정상적인 공사비를 낙찰 때 확보해주고 시공단계의 추가 변경 등을 제어해 준공단계의 목표공사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싸게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발주기관의 인식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 건설 선진국인 일본의 공공공사 낙찰률은 일반적으로 92% 수준이며 미국 연방교통부(DOT)는 95~112% 선이다.

발주자 위주의 계약문화 개선으로 공공부문의 이른바 ‘갑(甲)질’을 퇴출시켜야 한다. 최 실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수익성 우선 풍토가 만연해 불공정 관행이 양산되고 있다”며 “공사비 부당삭감,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